

## 위기결집효과의 소멸과 당파성 정치의 복원: 코로나19 장기화의 정치적 영향\*

배진석\*\*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조성되었던 위기결집효과(rally around the flag)의 약화 및 소멸과정에서 발현되는 당파성 정치의 특성을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변화를 통해 고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팬데믹 관련 위기결집효과의 발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 효과의 지속성과 소멸과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역성고가 압도적으로 양호할 때, 정치적 반대세력은 그 성과를 부정하기 힘들어 상대적으로 이념 간 평가의 격차가 줄어든다. 다만 정치적 반대자는 방역 성과의 공로를 대통령에게 돌리려 하지 않는다. 둘째, 방역 성과에 논란의 여지가 생기면, 정치적 지지자와 반대자들은 각각 그 성과를 평가절상하거나 평가절하한다. 그 결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념적으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방역 성과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이념이나 정책선호보다 대통령에 대한 호오감정에서 비롯된 정서적 양극화일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는 팬데믹이라는 예외적 위기의 순간에도 적응력을 발휘하는 당파적 사고의 영향력을 확인했다.

주제어: 코로나19, 당파성, 위기결집효과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3A2075609)

\*\* 미국 텍사스대학교(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치체도 및 정치행위 등이다(baejs1@gnu.ac.kr).

## I. 서론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조성되었던 위기결집효과(rally around the flag)의 약화 및 소멸과정에서 발현되는 당파성 정치의 특성을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변화를 통해 고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K방역”으로 불리던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방역정책의 보건 목표와 경제 목표를 상생적으로 성취한” 사례라는 경험적 연구도 뒤를 이었다(김정, 2021, 202). 그 결과 대통령 및 정부여당에게 우호적 평가가 몰리는 결집효과가 나타났다. 임기 초반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기대감으로 고공행진 했다가 담보상태에 빠졌던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70%를 상회했고, 그 시기와 겹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여당은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원선거 중 최고의 압승을 거두었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감염병이 촉발한 위기상황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정치적 기회로 작동한 셈이다.

위기결집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정점에 이르렀던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서너 달을 넘기지 못하고 원래 수준으로 복귀했다. 확산 위기와 경제 침체 등 심각성은 그 대로였지만, 코로나19를 둘러싼 국내상황은 이미 정치화되었다. 위기결집효과 기간에 억제되었던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정치적 지지자와 반대자 사이에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코로나 발발 초기 위기상황이 지배적이었을 때 제약되었던 당파성 정치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 당파적 성향을 가진 시민은 어떤 정당화 과정을 통해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을 평가하는가? 팬데믹 관련 위기결집효과의 발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Bol et al. 2020; Bækgaard et al. 2020; Esaiasson et al. 2021; Hegewald and Schraff 2020; Schraff 2020; Yam et al. 2020), 이 효과의 지속성과 소멸과정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파성 정치가 복원되는 메커니즘은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 연구는 2020년 8월 하순과 2021년 8월 하순에 각각 실시된 두 차례의 패널조사를 이용해 이 기간 동안 당파적 성향을 가진 응답자들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인식, 대응평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1차 조사 시기는 정치적 결집효과가 약화되는 시점이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방역성과가 아직 긍정적으로 평가받던 시기이다. 이른바 “K방역”의 긍정적 효과가 여전히 응답자들에게 남아 있었다. 반면 2차 조사는 정치적 결집효과가 소멸단계에 이르러 대통령과 정부의 방역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50%대 이하로 하락하던 시기이다. 이 두 시기에서 당파성으로 동기화된 평가가 각각 발휘되는 메커니즘에 이 연구

는 주목한다.

이 연구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역성과가 압도적으로 양호할 때, 정치적 반대세력은 그 성과를 부정하기 힘들어 상대적으로 이념 간 평가의 격차가 줄어든다. 다만 정치적 반대자는 방역 성과의 공로를 대통령에게 돌리려 하지 않는다. 둘째, 방역성과에 논란의 여지가 생기면, 정치적 지지자와 반대자들은 각각 그 성과를 평가 절상하거나 평가절하한다. 그 결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념적으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방역성과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이념이나 정책선호보다 대통령에 대한 호감감정에서 비롯된 정서적 양극화일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II장은 팬데믹과 위기결집효과의 등장 및 약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소개한다. III장은 한국 사례를 통해 위기결집효과의 등장과 소멸과정을 기술한다. IV장은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V장에서 통계적 방법으로 이를 검증한다. VI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론적 함의를 논의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팬데믹과 위기결집효과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는 정부와 여당에게 불리한 정치적 소재로 인식되어 왔다. 재난 피해자들이 집권당과 정부에게 비난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Yates, 1988; Achen and Bartels, 2004; Arceneaux and Stein, 2006; Cole et al., 2012; Eriksson, 2016).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이른바 맹목적 회고(blind retrospection)를 피하기가 어려웠다. 반론도 있다. 자연재해를 적절하게 잘 대응할 경우, 오히려 정부와 여당에 대한 평가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Rubin, 2020; Stout, 2018; Bechtel and Hainmueller, 2011; Remmer, 2014). 재난 피해자들의 관심은 재난 그 자체가 아니라 재난에 대처하는 정부와 여당의 능력(competence)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조정된 회고(mediated retrospection)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자연재해가 정부와 여당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추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코로나19 발생 초반인 2020년 3월과 4월 동안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정치지도자들은 지지를 급등을 경험했다(The Economist 2020/05/09). 많은 연구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정치적 지지가 급등하는 현상을 위기결집효과(rally around the

flag)로 파악하고 있다(Bol et al., 2020; Bækgaard et al., 2020; Esaiasson et al., 2021; Hegewald and Schraff, 2020; Schraff, 2020; Yam et al. 2020). 전쟁과 같은 국제분쟁의 영역에서 논의되던(Mueller 1973) 위기결집효과가 테러리즘 등으로 확대되다가(Woods, 2011)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팬데믹에서 비롯된 위기결집효과는 기존의 결집효과와 그 조건에서 차별성이 있다. 전쟁이나 테러처럼 외부의 적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도 않고, 따라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존재할 리도 만무하며, 위기의 발생 시간도 불명확하기 때문이다(Dietz et al., 2021). 다만 위기결집 발생 메커니즘은 전쟁이나 테러와 매우 유사하다. 우선 전쟁이나 테러 등의 외부위협은 시민들에게 심각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시민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지도자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팬데믹도 마찬가지이다. 섣달과 같은 정부의 위기대응 조치들은 전쟁 상황에 준할 만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 위협을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애국심 학파”(The Patriotism School)의 주장처럼 대통령과 같은 정치지도자는 위기상황을 극복할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된다(Baker and O Neal, 2001). 또 하나의 공통점은 위기상황이 탈정치화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전쟁과 테러와 같은 외부 위협은 국내 정쟁을 멈추게 하고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여론의 결집을 유도한다. 이른바 “여론 리더십 학파”(The Opinion Leadership School)의 주장처럼 위기 상황에서 야당의 비판도 잠정 중단되고 야당 역시 집권당의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행렬에 빠질 수가 없게 된다. 이에 영향을 받은 여론 역시 당파적 접근을 멈춘다. 그 결과 대통령과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지도세력에게 여론의 지지가 결집될 수밖에 없다. 정치지도자들 역시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마련이다(Baekgaard and Christensen et al., 2020). 또한 여론이 분열되어 있던 국가일수록 위기결집효과는 커지게 된다 (Baum, 2002).

다만 팬데믹에서 비롯된 위기결집효과는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전쟁 등과 같은 국제분쟁에서 비롯된 위기결집효과가 그러했듯이, 위기가 해소되면 결집효과 역시 약화 혹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정치적 귀결이 이를 잘 보여 준다. 1979년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사건으로 31%의 지지율에 그쳤던 카터 대통령은 1980년 1월에 58%까지 지지율이 올랐지만, 결국 그해 11월 재선에 실패했다. 쿠웨이트 파병으로 1991년 1월에 87%까지 지지율이 올랐던 조지 부시 대통령은 1992년 선거에서 클린턴에게 지고 말았다. 2001년 9.11 테러사건으로 90%까지 지지율이 급등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4년 대선에서 총 득표수에서는 졌지만 가

까스로 재선에 성공했다 (New York Times, 2020/04/15). 팬데믹으로 비롯된 위기결집효과 역시 이와 다르리라는 보장이 없다.

팬데믹 관련 위기결집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는 결집효과의 생성 과정에 대한 정치적 특성을 주로 탐구했지만, 이 결집효과의 약화 및 소멸과정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일부 연구에서 팬데믹 관련 위기결집효과를 시기적으로 구분해 그 특성을 밝히려는 시도가 있었다(Johansson et al., 2021). 이 연구에 따르면, 결집효과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위기 초반에 결집효과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위기의 정후도 뚜렷하고 급박하다. 이 때 시민들은 정부의 실제 대응 성과나 본인의 정치적 성향으로 정부 여당을 평가하지 않는다(Yam et al. 2020). 그 결과 정치 리더에 대한 지지율은 급등한다. 이른바 “애국심 학파”의 설명이 설득력을 얻는다. 2단계는 위기결집효과가 약화되는 시기이다. 위기가 해소되지 않았지만, 급박성은 줄어들었다. 시민들도 위기상황을 “뉴노멀”로 받아들인다. 위기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야당과 언론은 정부 위기관리의 부실과 실책을 지적한다. 1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정부의 위기관리 성과에 관심이 모이기 시작한다. 위기는 여전하지만, 동시에 대응평가는 정치화되기 시작하면서 당파성이 출현한다. “여론 리더십 학파”의 결집효과 생성에 관한 설명방식을 뒤집으면 2단계의 전개가 설명된다. 3단계는 위기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아져 위기결집효과가 소멸하는 시기이다. 시민들이 정부를 평가할 때 본격적으로 당파적 입장을 적용하게 된다 (Johansson et al., 2021).

## 2. 위기결집효과의 약화와 당파성의 등장

이 연구는 팬데믹 위기결집효과의 약화 및 소멸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의 부족분을 보강하기 위해 경제투표 분야의 연구에서 경제상황 인식에 미치는 당파성의 역할을 응용하기로 한다. 위기결집효과의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로 접어들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민들이 정부의 성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부 성과에 대한 평가에는 위기결집효과로 인해 유보되었던 시민의 당파성이 개입하게 된다.

널리 알려진 대로, 당파적 성향의 시민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집권 여부에 따라 객관적 경제상황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자신의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했을 경우 경제상황을 우호적으로 평가하지만, 자신이 반대하는 정당이 집권했을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Bartels, 2002; Evans and Anderson, 2006; Wlezien and Franklin et al., 1997). 집권당의 실책이 명확할 때에도 당파적 인식에 따라 그 위험성을 축소하거나, 반대로 성과가 나쁘지 않을 때에도 정치적 반대의

동기로 그 위험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당파성으로 동기화된 사고(partisan-motivated reasoning)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당파성으로 동기화된 사고는 객관적 현실이나 정부의 성과가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생길 때 작동하기 쉽다. 객관적 현실이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정보가 주어지면, 당파성으로 동기화된 사고는 제약을 받는다(Parker-Stephen, 2013; Staning, 2013). <그림 1>에서 회색 배경의 영역(영역 B-E)이 당파적 사고가 작동하는 영역이다. 우선 정부의 성과가 중간 정도라고 가정할 경우(영역 C와 D),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여부에 따라 이 성과는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 여당 지지 성향의 시민은 객관적 현실을 가능한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시도할 것이고, 야당 지지 성향의 시민은 반대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할 것이다. 이 때 정부의 성과에 대한 양측의 평가에는 원심력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성과가 아주 높을 경우, 야당 성향의 시민이라도 그 성과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소극적으로라도 그 성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영역 B). 반대로 정부의 성과가 아주 낮을 경우, 여당 성향의 시민이라도 무작정 정부를 옹호하기 쉽지 않다(영역 E). 소극적으로라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정보가 주어질 경우, 당파적 사고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 정부에 대한 평가에는 구심력이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1> 정치적 성과와 정치성향의 조합**

		정치성향	
		지지	반대
성과	고	적극적 긍정 A	소극적 긍정 (공로 전가) B
	중	평가절상 C	평가절하 D
	저	소극적 부정 (책임 전가) E	적극적 부정 F

다만 최근의 연구는 당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방법을 관찰했다. 자신의 당파성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일종의 면허증(a license to rationalize)”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정부의 성과가 아주 나빠 반박이 불가능할 때, 여당 지지자들이 찾은 합리화의 방법은 책임 전가(buck-passing)이다. 비우호적인 국

제경제상황, 야당의 비협조, 언론환경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상황이 나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Bisgaard, 2015). 반대로 정부의 성과가 아주 좋아 반박이 불가능할 경우, 야당 지지자들이 찾는 합리화의 방법은 그 공을 정부 여당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공로 전가(credit-passing)이다. 대통령이 잘 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관료의 전문성, 우호적인 국제경제환경,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 등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론의 여지없이 명백한 정보 앞에서도 당파성은 합리화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낸다. 이상의 논의가 <그림 1>의 세로축, 즉 정부의 성과와 관련되어 있다면, 다음 절에서 논의할 지점은 <그림 1>의 가로축이다.

### 3. 정서적 경향에 기반한 당파성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양극화의 실체인 당파성 그 자체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과연 당파성의 실체가 이념 혹은 정책선호 차원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감정적 혹은 정서적(affective) 차원의 양극화와 그 결과로 형성된 당파적 배열(partisan sorting)에 관심을 두고 있다 (Druckman and Levendusky, 2019; Fiorina, 2017). 한국정치에서 정치엘리트 간의 이념적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상준, 2016; 강원택, 2012)가 있지만, 이에 비견할 만한 이념 및 정책선호 차원의 양극화가 유권자 수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관심을 끌고 있다(이내영, 2021; 정동준, 2018; 정한울 2020). 이 격차를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한국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길정아·하상용 2019; 배진석, 2021; 장승진·서정규, 2019; 정동준, 2018). 정서적 양극화에서 당파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대통령에 대한 호오감정에서 찾는 연구도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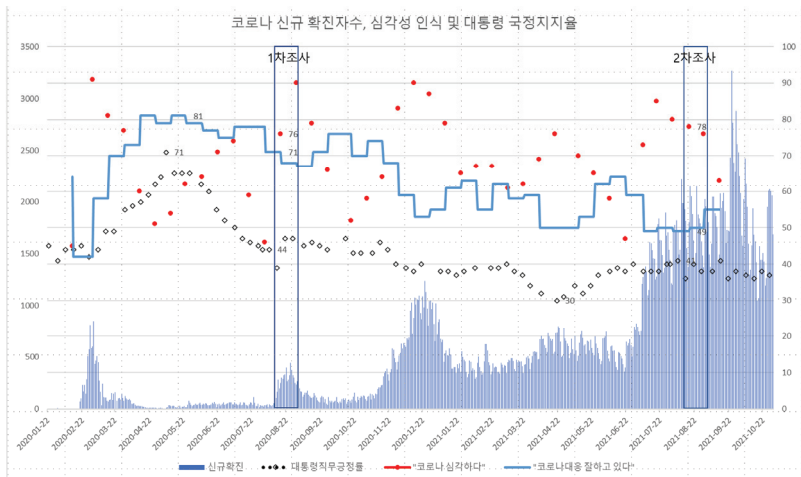
기존 연구들이 당파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종류였다. 우선은 설문문항에서 지지정당을 묻는 방식이다. “지지하는 정당”, “선호하는 정당”, “좀 더 가깝게 느끼는 정당” 등의 설문문항이 주로 사용되었다. 다만 이 측정방법이 한국적 맥락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당파성의 핵심인 소속감, 정체성, 그리고 심리적 애착 등의 요소들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하나의 방식은 주관적 자기이념 인식을 묻는 방법이다. 이 방식 역시 한계가 있다. 구체적인 정책선호와 자기이념인식 간의 격차도 크고, 중도층이 지나치게 과대 포착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온도계 방식으로 호감도(feeling thermometer)를 통해 당파성을 측정하는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

다(Burden and Klofstad, 2005; 이한수, 2020). 정서적 경향(affective orientation)에 바탕을 둔 당파성 혹은 정당일체감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기존의 정당지지 방식에서 측정된 무당파층이나 자기이념인식 측정방식에서 측정된 중도층의 정치적 성향을 보다 잘 포착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Ⅲ. 코로나19 관련 위기결집효과의 등장과 소멸

〈그림 2〉는 한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하순부터 2021년 10월까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코로나 심각성 인식 정도, 대통령 국정지지율,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패널데이터의 경우 1차 조사는 2020년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2차 조사는 2021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었다.

〈그림 2〉 코로나19 관련 객관적 상황, 인식 및 평가 (2020-2021)



[자료출처] 신규확진: Our World in Data, 대통령직무공정률: 한국갤럽, 코로나 심각성 및 코로나 대응 평가: 한국리서치

막대그래프는 1일 확진자 수, 다이아몬드 빈 점으로 표시된 선은 대통령 국정지지율, 푸른색 단선은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긍정 평가율, 그리고 붉은 원형 점은



코로나 상황을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대중의 비율을 나타낸다.

1일 확진자수를 보면, 2020년 2월 하순경에 1일 신규감염자 수 7백여 명 대까지 증가한 1차 확산, 그리고 2020년 8월경에 3-4백 명 대 규모의 2차 확산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소강기를 거쳐 2020년 연말에 1일 1,200명 대의 3차 확산이 있었고, 한동안 5-600명 대의 시기를 거쳐 2021년 7월 중순부터 하루 2천여 명 대까지 확진자가 증가했다. 이 그림에서 확진자 수 최고점은 2021년 9월 24일로서 3,270명을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2020년 2사분기에 급등한 것이 확인된다. 임기 초 허니문 효과와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80%대를 넘나들던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2019년 상반기부터 50%대 아래로 떨어졌다가 코로나 1차 확산 이후인 2020년 2사분기에 급등해 70%를 넘기도 했다. 이 시기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기도 했다. 많은 언론에서 대통령 국정지지도의 급등과 민주당의 승리를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과 연결시켜 해석했다 (한국경제2020/04/14; 중앙일보 2020/04/16; 헤럴드경제 2020/04/16). 정부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신정섭 2020)도 제시되었다. 21대 총선 결과를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회고적 평가로 일반화하기 힘들고 유권자의 정파적 지형에 의한 결과임을 주장하는 연구(길정아 강원택 2020)도 있지만,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결집효과를 부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이 위기결집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70%를 넘기도 했던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2020년 3사분기 들어 다시 코로나 확산 이전 수준인 40%대로 하락했다. 2021년 2사분기에는 30%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40% 내외로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우호적 평가 역시 2020년 2사분기에 80%대까지 상승해 정점을 찍었다. 이 시기는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급등해 위기결집효과가 나타났던 시기와 일치한다. 그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2021년 3사분기에는 50%대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코로나 상황을 심각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이 기간 동안 등락을 거듭했다. 대체로 1일 확진자 수가 폭증해 코로나 상황이 확산될 때에는 심각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급등했다. 이 기간 동안 1차, 2차, 3차 확산시기에 심각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90%대까지 증가했다.

이 정보들을 종합해 1, 2차 조사시기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조사가 실시된 2020년 8월 하순은 당시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폭증하던 2차 확산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 결과 코로나 상황을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70-80%대에 이르고 있다.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39%까지 하락한 시점이었다. 위기상황은 그대로 높게 인식되고 있지만, 위기결집효과는 약화된 상황이다. 이 시기는 선행연구에서 구분한 위

기결집효과와 2단계에 해당된다(Johansson et al. 2021). 다만 이른바 “K방역”에 대한 우호적 평가는 정치적 결집효과가 약화되어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던 상황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코로나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층이 70%대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2차 조사가 실시된 2021년 8월 하순은 1일 확진자 수가 2천명 대에 이르던 시기였다. 그 결과 심각성 인식 비율도 80%대에 이르렀다.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30%대 후반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이상의 조건들은 1차 조사 시기와 큰 차이가 없다. 1차 조사와 결정적인 차이는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70%대에서 50% 이하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야당과 언론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의 부실과 실책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K방역”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던 시점이다. 결정적인 요인은 백신공급이었다. “한국은 어쩌다 ‘K방역’에서 ‘백신 접종 꼴찌’가 되었나”(BBC코리아 2021/8/25)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2021년 8월 24일 기준으로 한국의 백신접종률 24%는 OECD 38개국 중 36위를 차지하고 전 세계 평균에도 못미친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으로 국민들이 이른 ‘K방역’에 정부가 도취되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백만 명당 하루 확진자 수, 치명률 등 백신접종률을 제외하고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여전히 방역 선진국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오마이뉴스 2021/08/21).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대중의 긍정적 평가가 50% 이하로 하락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힘들었다.

요약하자면, 1차 조사시기는 비록 정치적 결집효과가 약화되는 시점이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방역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시기였다. 반면 2차 조사시기는 정치적 결집효과가 소멸단계에 이르렀고 대통령과 정부의 방역성과도 50%대 이하로 하락해 방역성과가 부정적 단계로 넘어가던 시기였다.

## IV. 연구가설 및 분석 방법

### 1. 연구가설

앞에서 살펴본 <그림 1>은 정치성향과 정치적 성과를 축으로 지지그룹과 반대그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을 표시하고 있다. 성과가 압도적으로 양호할 경우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그 성과를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영역 A). 성과가 압도적으로 미진할 경우 정치적 반대세력들은 당연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영역 F). 따라서 <그림 1>에서 A와 F 영역에서 당파적 편향이 개입할 여지는 적다.

이 연구의 관심은 그림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B-E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성과가 논란의 여지없이 양호할 때 정치적 반대세력은 그 성과를 부정하기 힘들다. 이 때 정치적 반대세력이 당파적 사고를 할 경우, 성과의 공로를 대통령에게 돌리려 하지 않는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영역 B). 반대로 그 성과가 논란의 여지없이 낮을 때에는 정치적 지지세력 역시 그 상황을 부정하기 힘들다. 이 때 정치적 지지세력이 당파적 사고를 할 경우,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영역 E) (Bisgaard 2015). 방역의 성과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정도로 중간일 경우에는 정치적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 당파적 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영역 C와 D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치적 지지자는 그 성과를 평가절상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자는 평가절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 평가 자체가 이념적으로 양극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1차 조사시기는 비록 결집효과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방역성과가 비교적 양호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역성과를 부정하기 힘든 보수적 성향의 반대자들이 방역의 성과를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려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차 조사시기는 방역성과가 중간 단계로서 관점에 따라 성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2차 조사시기로 넘어가면 객관적인 방역성과의 저하에 대한 단서(cue)가 야당으로부터 제시되고, 언론을 통해 전파된다. 방역성과를 인정하기 곤란해 당파성이 제약되었던(Erikson and Tedin 2005) 보수적 응답자들은 정서적 불편함 없이 그 성과를 최대한 평가절하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맞서 진보적 응답자들은 반대로 최대한 그 성과를 평가절상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2차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평가는 이념적으로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 논문이 작성되고 있는 2022년 1사분기에는 이전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진자가 폭증해 영역 E와 F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1, 2차 조사로 한정된 이 논문의 분석시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의 문제의식으로 아래의 <가설 1>을 검증하고자 한다.

### <가설 1>. 양극화 가설

- 1-1 (공로 전가) 대통령과 정부의 방역성과가 이론의 여지없이 양호할 경우, 정치적 반대자들은 그 공로를 대통령에게 돌리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1-2 (평가절하-평가절상) 방역성과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정도로 중간 단계일 경우, 대통령에게 비우호적인 보수적 응답자는 그 성과를 평가절하하고,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진보적 응답자는 그 성과를 평가절상할 가능성이 크다.
- 1-3 (양극화) 방역성과가 양호하다가 중간 단계로 낮아지면, 응답자들의 평가는 이념적으로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관련 각종 정책과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념적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응답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바탕을 둔 자기이념 인식이 과연 이념 및 정책선호 차원의 차이인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정치 엘리트 차원에서 이념적 양극화를 확인한 연구들이 있지만(가상준, 2016; 강원택, 2012), 유권자 수준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연구들도(이내영, 2011; 정동준, 2018)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 중의 하나로 정서적 경향(affective orientation)에 따른 양극화가 주목받고 있다(Druckman and Levendusky, 2019; Fiorina, 2017; 길정아·하상용 2019; 배진석, 2021; 장승진·서정규, 2019; 정동준, 2018). 정당지지로 표현되는 당파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기이념인식보다도 문제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연구도 있다. 진보-보수로 구분되는 자기이념 인식과 문제인 대통령에 대한 호오감정의 상관관계가 통념만큼 크지 않다는 설명이 그 배경에 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정치지도자에 대한 감정적 차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평가의 양극화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 〈가설 2〉 (정서적 양극화 가설)

방역성과에 대한 평가의 이념적 격차는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응답자들의 호오감정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2. 데이터 및 연구방법

팬데믹 지속에 따라 시민들의 상황인식과 대응평가, 그리고 행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 이 연구는 2차례에 걸친 패널조사를 활용한다. 두 차례의 조사는 SSK 거버넌스 다양성 연구단이 기획하고 한국리서치가 실행했다. 1차 조사는 2020년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표본크기 1,507명을 대상으로 실행되었고,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을 활용해 표집되었으며 웹조사 방식을 취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5\%$ 이고, 응답율은 요청대비 33.9%, 참여대비 85.1%이다. 2차 조사는 2021년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2020년 1차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중 조사완료된 인원은 1,103명으로서, 패널 유지율은 73.2%이다.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0\%$ p이다. 이후 이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이 조사를 근거로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차 조사시기는 코로나19 관련 위기결집효과가 약화되었지

만 여전히 방역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시기였다. 2차 조사 시기는 위기결집효과가 거의 소멸되면서 방역성과마저 부정적 평가로 돌아서던 시점이다. 따라서 이 데이터는 대응성과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당파적 편향을 1, 2차 패널조사로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성과가 압도적으로 양호할 때 정치적 반대자들의 공로 전가 경향과, 성과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중간단계로 낮아졌을 때 정치적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각각 보일 수 있는 평가절상 및 평가절하 경향을 당파성 관점에서 관찰하기에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는 코로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개별행동, 주체 및 정책별 대응 평가 등과 관련된 응답자들의 인식 및 태도이다. 설문문항 별로 척도가 상이한 점과 인식 및 태도 간의 변화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종속변수들은 0과 1사이로 정규화(normalization) 과정을 거쳤다.<sup>1)</sup> 회귀계수 간 비교가 주목적이라는 점도 정규화의 이유가 된다.

1년의 기간을 두고 두 번에 걸친 패널조사에서 같은 응답자들의 인식 및 태도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주요 관심 독립변수로 “wave2”라는 더미변수를 설정한다. 이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는 2차 조사에서 관찰된 응답자들의 인식 및 태도가 1차 조사와 얼마나 다른지를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다른 관심 독립변수는 자기 이념인식이다. 0(가장 진보)에서부터 10(가장 보수)까지 응답자가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이념을 이 연구는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추가적으로 정서적 경향에 기반한 양극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념인식의 대체변수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오감정을 분석에 포함한다. 대통령에 대한 호오감정은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느낌을 온도계의 온도 (0 -100)”로 표시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념인식과 대체해 비교할 수 있도록 이념과 마찬가지로 11단계로 조정했으며 역으로 코딩했다. 두 시기 간에 응답자들이 이념인식과 호오감정을 변화시켰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념인식과 대통령에 대한 호오감정은 1차조사의 결과를 사용했다. 연령, 성별, 교육수준, 자산, 자가소유여부, 결혼상태 등의 통제변수 역시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 연구가 활용하는 추정모델은 최소자승법(OLS)이다. 리커트 척도 문항의 설문조사 분석에서 자주 활용되는 순서화로그릿(ordered logit) 모델 대신 OLS를 사용한 이유는 이 분석이 1, 2차 조사 기간 사이의 인식 및 태도 변화를 관심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회귀계수의 비교가 용이해야 한다. OLS를 추정모델로 선택

1) 최소-최대 정규화(Min-Max Normalization) 공식은 다음과 같다.

$$norm(x) = x - \min(x) / \max(x) - \min(x)$$

한 다른 이유는, 이 연구가 ‘wave2’라는 더미변수와 이념(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호 오감정)을 함께 고려하는 상호작용변수를 독립변수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순서화모짓과 같은 비선형모델의 상호작용효과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있다(박선경, 2020). 1, 2차 조사시기와 이념을 동시에 고려해 상호작용 변수를 활용하고 이를 예측한계(predictive margins)로 도식화해 응답자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관찰하는 데에는 OLS와 같은 선형모델에 장점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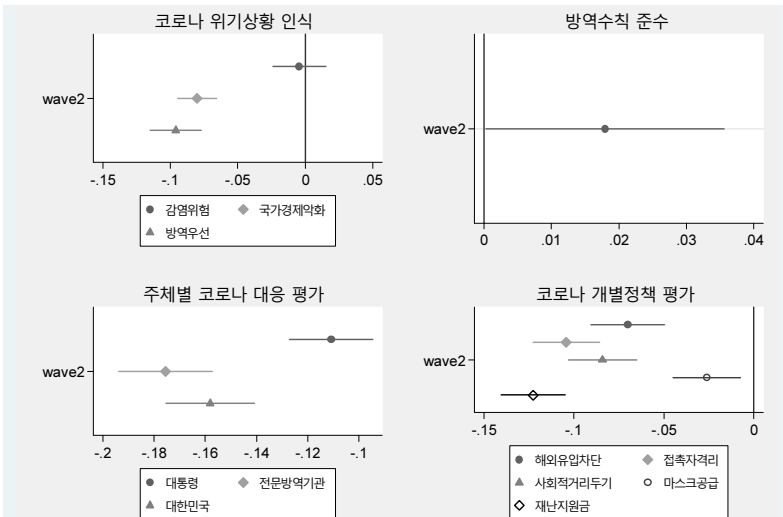
## V. 분석결과

### 1. 인식 및 태도의 변화와 유지

〈그림 3〉은 1, 2차 조사 간에 확인된 응답자들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인식 및 행동, 그리고 성과 평가에 대한 태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의 좌측상단은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본인이 코로나 19에 감염될 위험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유의미

〈그림 3〉 1, 2차 조사기간 중 주요 종속변수의 평균 예측 변화



주: “wave2”는 1, 2차 조사기간 중 주요 종속변수들의 OLS 추정치 변화임. 회귀분석 전체 결과는 [부록 1 및 부록 2] 참조

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그림 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 2차 조사 시기에 코로나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차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6개월간 귀하 본인과 국가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차 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축소되었다. “경제성장에 타격을 주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에 동의하는 비율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축소되었다. 이 두 변수의 영향력이 의미있게 축소된 것은 위기인식에 대한 사회적 긴장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차 조사 때 확인되었던 뚜렷한 위기인식이 장기화되고 있는 팬데믹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감염위험 등은 여전하지만, 경제상황 악화나 방역우선을 중시하는 태도에 변화가 감지된 것이다. 이 같은 사회적 긴장도의 완화는 위기결집효과의 약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위기결집효과가 발휘된다는 의미는 당파성 발현에 제약이 가해진다는 의미인데(Erikson and Tedin, 2005), 이 결집효과의 약화로 인해 당파성에 바탕을 둔 인식이나 태도가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의 우측 상단에서 흥미로운 점은 위기극복을 위한 실제 개인의 방역행동수칙은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권고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사적 모임 피하기 등)을 얼마나 준수”하느냐는 문항에 대한 긍정적 답은 오히려 1차 조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코로나 발생 초기에 “시민의 자발적 정책순응(compliance)을 담보로 하는” 우위방역이 한국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김정, 2021)이 2차 조사의 결과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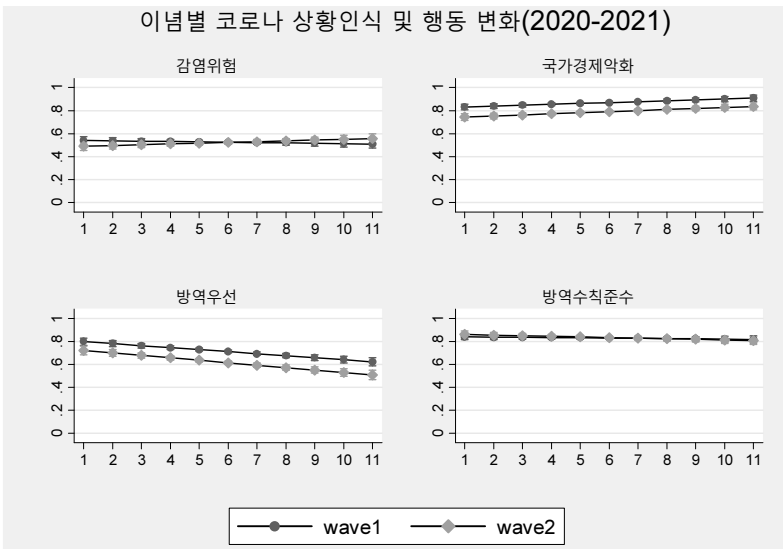
<그림 3>의 좌측하단은 대통령, 전문방역기관, 그리고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코로나 19를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변화를 나타낸다. 세 항목 모두 긍정적 평가가 유의미하게 축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2차 조사에서 확인된 부정적 변화의 크기는 전문방역기관과 대한민국이 대통령보다 컸다. <그림 3>의 우측 하단은 코로나19 관련 개별정책에 대한 평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해외유입차단 정책, 접촉자 격리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마스크 공급 정책, 그리고 재난지원금 정책 모두 긍정적 평가가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다. 마스크 공급 정책에 대한 평가 변화가 가장 작았고,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평가 변화가 가장 컸다.

2) <그림 3>에서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된 “wave2” 변수의 신뢰구간이 0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표시되었지만, [부록 1]에서 확인되었듯이 이 변수의 계수는 0.032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 2. 이념별 인식 및 태도 변화

〈그림 4〉는 이념별 코로나 상황인식 및 행동변화를 1, 2차 시기별로 시각화해 비교한 결과이다. ‘wave2’ 변수와 이념인식 간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해 회귀분석한 후, 예측한계(predicative margins)를 95% 신뢰수준에서 도식화했다. 그래프의 X축은 1(가장 진보)부터 11(가장 보수)까지 이념인식을 나타내고,<sup>3)</sup> Y축은 개별 항목의 예측한계 값을 표시한다.

〈그림 4〉 코로나 상황인식 상호작용 모델의 예측한계값



주: 상호작용변수 및 통제변수 포함된 OLS 추정치의 예측한계값. 회귀분석 전체 결과는 [부록 3] 참조

감염위험에 대한 상황인식은 1, 2차 조사 간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인식에 미치는 이념의 영향력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좀 더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그래프의 기울기인데, 감염위험 관련 그래프의 기울기는 거의 평평해서 진보-보수 간에 감염위험에 대한 상황인식에서 두 시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에서 권고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

3) 설문문항에서 이념인식은 0에서 10까지로 측정되었으나, 상호작용 변수를 생성할 때 0의 값이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에서 11로 조정했다. 중도를 의미하는 중간값은 6이다.



금지, 사적 모임 피하기등)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는 문항 역시 1, 2차 조사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답변이 확인되었다. 이념적 차이도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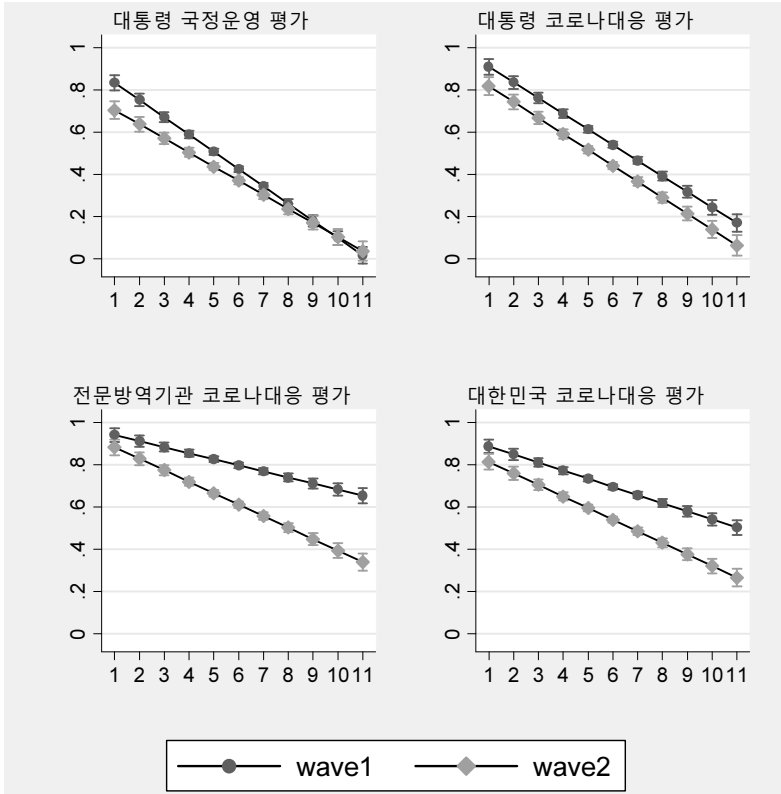
앞서 <그림 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가경제악화와 방역우선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하락은 <그림 4>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2차 조사의 예측한계 값이 모두 1차 조사보다 하락했다. 지난 6개월간 국가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진단은 진보-보수할 것 없이 1차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 조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예측한계 값이 그래프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조사자의 대부분은 경제상황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수 쪽이 진보 쪽보다 조금 더 경제상황을 어렵게 보고 있지만, 이 인식 역시 이념간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로 당파적 성향을 가진 시민은 자신이 반대하는 정당이 집권했을 때 부정적으로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했을 때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Bartels, 2002; Evans and Anderson, 2006; Wlezien and Franklin et al., 1997). 따라서 보수적 응답자가 국가경제상황을 악화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당파적 사고에서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진보적 응답자 역시 국가경제상황을 매우 악화된 상황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는 현재의 경제상황 악화가 코로나19라는 일종의 재난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책임이 아니라 천재지변에서 비롯된 것이고, 비단 한국만의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에 타격을 주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비율은 1차 조사에 비해 다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좌측 가장 진보와 우측 가장 보수 간에도 미미한 차이가 발견된다. 국가경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수 쪽이 인식하고 있지만, 경제성장에 타격을 주더라도 방역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보수 쪽이 조금 더 낮게 확인되었다. 이 그래프에서 확인된 기울기는 뒤에서 살펴볼 대응평가 항목과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 3.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

<그림 5>는 이념별로 1, 2차 조사 시기 간의 코로나 대응 평가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통령, 전문방역기관,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항목에서 코로나 대응에 대한 우호적 평가가 2차 조사에서 줄어들었다.

〈그림 5〉 코로나 대응평가 상호작용 모델의 예측한계값



주: 상호작용변수 및 통제변수 포함된 OLS 추정치의 예측한계값. 회귀분석 전체 결과는 [부록 3] 참조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는 진보-보수 전 이념대에 걸쳐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1, 2차 조사 간 이념대별 하락 폭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서 확인되었듯이, 코로나 대응에 관한 평가 항목 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가장 이념 간 격차가 컸다. 1차 조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그룹의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평가가 예측한계 값 0.91인 반면, 가장 보수적인 그룹의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평가는 0.17에 그쳤다. 그 차이는 0.74에 달한다. 2차 조사에서도 이런 경향은 그대로 반복된다. 가장 진보적인 그룹의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평가는 0.82인 반면, 가장 보수적인 그룹의 평가는 0.06에 불과하다. 두 그룹 간 차이는 0.76이다. 다시 말해 1차 조사에서 반영된 당파성이 2차 조사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함께 표시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기율기가 거의 비슷하다. 이는 1차 조사 시점에서 이미 결집효과가 약화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70%에 달했던 2020년 2사분기에는 당파적 편향이 제약되었을 것이지만, 1차 조사시점인 2020년 8월 하순에는 국정지지율이 40% 이하로 하락하면서 결집효과는 사실상 약화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질병본부와 같은 전문방역기관에 대한 평가 역시 이념별 차이가 나타났으나,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확인된 이념대별 차이보다는 확연히 축소되었다. 1차 조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그룹의 우호적 평가는 예측한계 값 0.94이고 가장 보수적인 그룹의 우호적 평가는 0.65였다.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0.17)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가장 보수적인 응답자들도 전문방역기관의 대응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두 그룹 간 차이는 0.3 정도에 그쳐 그래프의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했다. 2차 조사에서 이 차이는 크게 확대된다. 가장 진보적인 그룹의 우호적 평가는 0.88을 유지했으나, 가장 보수적인 그룹의 우호적 평가는 0.33으로 하락했다. 진보적인 그룹의 우호적 평가는 0.06만큼 하락하는 것에 그쳤으나, 보수적인 그룹의 우호적 평가는 대폭 하락한 것이다. 그 차이는 0.53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1, 2차 조사 결과의 그래프 간 기울기 차이가 확연해졌다.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의 분석결과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 결과보다는 전문방역기관에 대한 평가의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1차 조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그룹의 우호적 평가는 예측한계 값 0.88이고 가장 보수적인 그룹의 우호적 평가는 0.50으로서 그 차이는 0.38 정도였다. 2차 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확대된다. 가장 진보적인 그룹의 우호적 평가는 0.81로서 소폭 하락했으나, 가장 보수적인 그룹의 우호적 평가는 0.27로 대폭 하락했다. 그 차이는 0.54로 확대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발견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차 조사에서 보수적 응답자들은 전문방역기관과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는 인색했다. 다시 말해 방역성과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그 공로(credit)를 대통령에게 돌리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른바 “K방역”에 대한 우호적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나 결집효과는 다소 완화된 1차 조사에서 확인된 보수적 응답자들의 당파적 태도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이 결과는 “대통령과 정부의 방역성과가 이론의 여지없이 양호할 경우, 정치적 반대자들은 그 공로를 대통령에게 돌리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 1-1을 지지한다(배진석, 2021).

2차 조사에서 진보적 응답자들은 일관되게 대통령, 전문방역기관, 대한민국의 코로

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수적 혹은 중도적 응답자들의 긍정적 평가 하락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방역지침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방역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지만, 진보적 그룹의 긍정적 평가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2차 조사 시기의 방역대응이 1차 조사시기보다 객관적으로 악화된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역시 진보적 응답자들의 당파적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일종의 평가절상인 셈이다. 반면 보수적 응답자들은 전문방역기관과 대한민국의 대응에 대해 큰 폭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결국 방역성과가 양호할 때 보수적 유권자들은 대통령에게 그 공(credit)을 돌리지 않고 전문방역기관이나 대한민국에게 돌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역성과가 예전만 못하게 되자, 이들은 전문방역기관이나 대한민국의 방역성과도 하향 평가를 했다. 경제투표 관련 연구에서 같은 경제상황을 두고 집권여당 지지자와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전자는 실제보다 경제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지만, 후자는 경제상황을 실제보다 악화된 것으로 과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한 쪽으로 기울지 않고 이론의 여지가 있다면, 이 경향은 더욱 강화된다. <그림 5>에서 전문방역기관이나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이념적 격차의 확대는 이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이 결과는 “방역성과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정도로 중간 단계일 경우, 대통령에게 비우호적인 보수적 응답자는 그 성과를 평가절하하고,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진보적 응답자는 그 성과를 평가절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 1-2를 지지한다. 동시에 이 분석 결과는 “방역성과가 양호하다가 나빠지면, 응답자들의 평가는 이념적으로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 1-3을 지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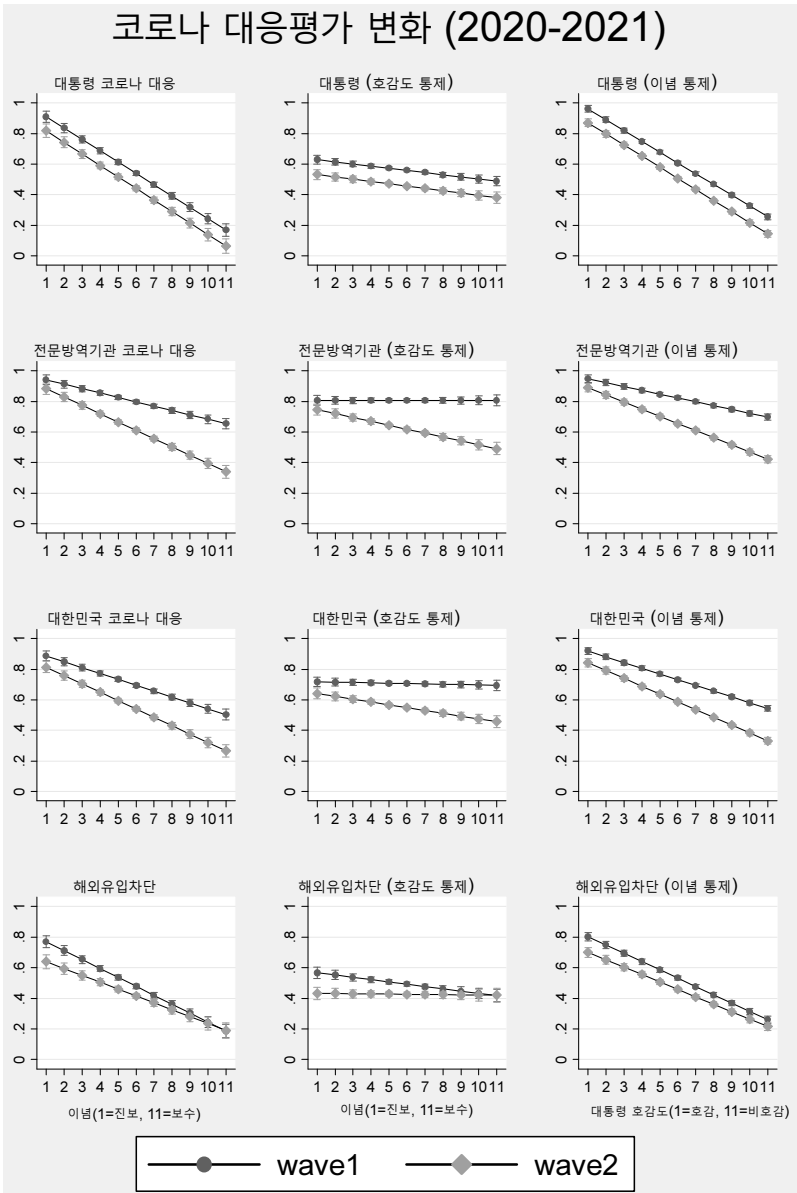
다만 전문방역기관이나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보수적 응답자들의 평가는 대통령에게 내렸던 부정적 평가만큼 하락하지는 않았다. 보수적 유권자는 전문방역기관이나 대한민국에 대한 대응평가를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차별을 둬으로써 방역성과가 하락한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당파적 사고의 부산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보적 응답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방역성과가 이론의 여지없이 악화되었다면, 전문방역기관에 대한 우호적 평가를 거둘 가능성도 있다. 방역성과 악화 상황을 합리화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일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는 방역성과가 나빠졌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그 책임을 정부여당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는 것이다(Bisgaard, 2015). 그 때 질병관리본부 같은 전문방역기관은 좋은 타겟이 된다. 다만 2차 조사 시점에서 방역성과가 그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백신공급이 늦어졌지만, 확진자 수나 중증화율, 그리고 사망률 등의 객관적 지표는 여전히 객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적 응답자들은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방역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 4. 코로나19 대응평가와 정서적 양극화

이 연구결과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정책과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념적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응답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바탕을 둔 자기이념 인식이 과연 이념 및 정책선호 차원의 차이인지 확인할 필요성을 가설 차원에서 제시한 바 있다. <그림 6>의 분석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그림 6>의 왼쪽 열은 <그림 5>와 동일하다. 가운데 열은 왼쪽 열의 회귀식에 대통령 호감도를 통제변수로 포함시킨 회귀식의 한계효과이다. 오른쪽 열은 주요 독립변수를 11점 척도인 대통령 호감도로 교체하고 11점 척도의 이념인식을 통제변수에 포함시킨 결과이다. 이 모형 간 비교에서 가장 우려되었던 점은 자기이념인식과 대통령에 대한 호오감정 간의 관계였다. 진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보수는 문대통령에게 비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 때문이었다. 이런 통념이 맞다면 이념적 중도층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 정도의 호오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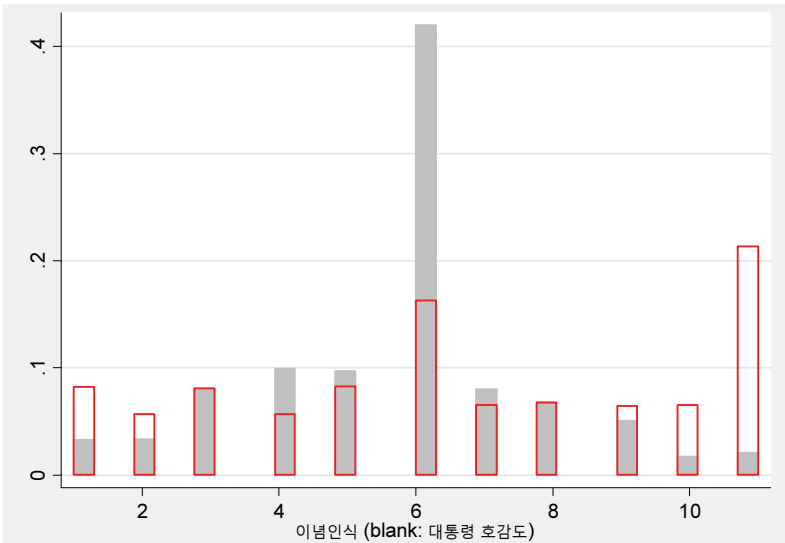
아래 <그림 7>의 히스토그램은 두 변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짙은 색으로 표시된 자기이념인식은 전형적인 단봉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중도라고 표시한 6점에 약 43%의 응답자가 분포되어 있다. 평균은 5.7로서 중도 6점을 기준으로 다소 좌측으로 기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좌우 균형이 갖추어진 구조이지만 진보성향의 응답자가 미세하게 우세한 상황이다. 반면 붉은색 빈 막대로 표시된 대통령에 대한 호오감정은 단봉형 구조가 아니다. 최빈값인 11에 약 21%의 응답자가 분포되어 있다. 그 다음이 중앙값인 6에 17% 정도의 응답자가 위치해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호오감정의 평균은 6.64로서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응답자가 다소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상관계수는 0.51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인 회귀분석에서 이 두 변수를 동시에 사용할 때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의심해볼 만한 수치이다. 이 분석에 사용된 모든 회귀분석에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점검한 결과 통상적인 기준인 10을 상회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6〉 이념 및 대통령 호감도 교체 모델



주: 상호작용변수 및 통제변수 포함된 OLS 추정치의 예측한계값. 회귀분석 전체 결과는 [부록 4] 참조

〈그림 7〉 이념인식 및 대통령 호감도 히스토그램



가장 특징적인 발견은 대통령 호감도를 통제변수에 포함시킨 가운데 열 그래프들의 기울기가 눈에 띄게 평탄해진 점이다. 특히 1차 조사의 경우 대통령 호감도를 통제하고 나면 진보와 보수 간의 평가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 되었다. 2차 조사에서도 일부 이념간 격차가 남아 있지만, 왼쪽 열의 그래프와 비교할 때 기울기의 완화 정도는 쉽게 확인된다. 그렇다면 왼쪽 열 그래프들에서 확인된 진보-보수 간 이념 격차는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호오감정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그림 6〉의 오른쪽 열 4개의 그래프는 이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해석을 제공한다. 가운데 열 4개의 그래프와 반대로 주요 관심 독립변수를 대통령에 대한 호오감정으로 삼고 이념인식을 통제한 예측한계 그래프가 오른쪽 열 4개의 그래프이다. 오른쪽 열 4개의 그래프는 왼쪽 열 4개의 그래프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이념인식 간 차이에서 확인된 양극화 경향은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호오감정에서 비롯된 양극화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 그래프는 시사하고 있다. 이 분석결과는 “방역성과에 대한 평가의 이념적 격차는 대통령에 대한 응답자들의 호오감정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 2를 지지한다.

## VI. 결론

위기결집효과가 약화되는 시점부터 소멸하는 시점까지 작동하는 당파성 정치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의문에서 이 연구는 출발했다. 팬데믹 관련 위기결집효과와 발생에 대한 활발한 연구에 비해, 그 지속성과 소멸효과에 대한 연구 관심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도 그 배경에 있다. 1년 간격을 두고 진행된 패널조사 분석을 통해 이 연구가 확인한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역성고가 이론의 여지없이 양호하다고 판단될 때, 정치적 반대세력은 그 성과를 드러내놓고 부정하기 힘들다. 이들은 방역 성과의 공로를 대통령이 아닌 전문방역기관이나 대한민국 전체의 성과로 돌리고 있음이 분석 결과 확인되었다. 대통령의 방역성고에 대해서는 정치적 반대세력들이 부정적 평가를 숨기지 않았다. 당파적으로 동기화된 사고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대통령을 제외한 전문방역기관이나 대한민국 전체의 대응에는 이념적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둘째, 방역성고에 대한 평가에 논란의 여지가 생길 경우, 당파적 사고는 그 가능성을 높게 된다. 백신수급에 대한 비판 등에서 확인되듯이, 이른바 “K방역”에 의문이 들면서 당파적 사고는 원심력을 가지게 된다. 정치적 지지세력은 이전에 비해 방역성고에 의문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기보다 평가절상의 방법을 취한다. 정치적 반대세력은 평가절하의 방법으로 당파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들은 실제보다 그 실적을 부풀려 평가했다. 방역성고에 대한 논란은 이념적 차이를 확대시켜 양극화로 이끌었다. 셋째, 방역성고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이념이나 정책선호보다 대통령에 대한 호오감정에서 비롯된 정서적 양극화일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유권자 수준에서 이념이나 정책선호에 따른 양극화의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이내영, 2011; 정동준, 2018).

주요발견을 통해 확인한 이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K방역”으로 각광받던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당파성의 영향력이 발휘되기에 힘든 사례(hard case)였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긴장도가 떨어지자마자 그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짧은 위기결집효과 기간 동안 잠복되었던 당파적 사고는 사회적 긴장의 이완을 틈타 ‘위기 정치’를 ‘정상 정치’, 즉 당파성 정치로 복원시켰다. 코로나19로 비롯된 팬데믹이 “예외적 재난의 시간”(Lipscy, 2020)이라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당파적 영향력과 정치적 양극화의 정도가 그만큼 막강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당파적 사고의 선택적 적응능력은 예상보다 컸다. 당파적 관점에서 부인하고 싶은 객관적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당파적 사고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Bisgaard,



2015). 객관적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 그 공로나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수적 응답자들의 공로 전가를 확인했지만, 방역상황이 악화될 경우 현 정부의 정치적 지지세력인 진보적 응답자들의 책임 전가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이 작성되고 있는 2022년 3월 현재, 1일 확진자 60만 명을 돌파하는 한국의 코로나 상황은 그 책임공방의 당파적 경로를 예상할 수 있게 한다. 게다가 코로나 19 위기결집효과로 정치적 이득을 취했던 집권여당은 불과 2년 후인 20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다. 앞서 언급했던 미국 대통령들과 그 위기결집효과의 허망이 한국에서도 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가상준. 2016. “정책영역별로 본 국회 양극화.” 《OUGHTOPIA》, 31(1): 327-354.
- 강원택. 2012. “제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의정연구》, 18(2): 5-38.
- 길정아·하상응. 2019. “당파적 편향에 따른 책임 귀속: 여야간 갈등인식과 정당 호감도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25(1): 46-78.
- 김정. 2021.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한국과국제정치》 37(1): 191-221.
- 박선경. 2020. “젠더 내 세대격차인가, 세대 내 젠더격차인가?: 청년 여성의 자기평가 이념과 정책태도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19(2): 5-36.
- 배진석. 2021. “당파적 태도가 코로나19 관련 대응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국제정치》, 37(1): 77-116.
- 신정섭. 2020. “코로나19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 정부대응 평가와 개인피해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9(3): 155-182.
- 이내영. 2011.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원인: 국민들의 양극화인가, 정치엘리트들의 양극화인가?” 《한국정당학회보》, 10(2): 251-285.
- 이한수. 2020.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단기적 당파성 변화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19(1): 5-31.
- 장승진·서정규. 2020. “당파적 양극화의 이원적 구조: 정치적 정체성, 정책선호, 그리고 정치적 세련도.” 《한국정당학회보》, 18(3): 5-29.
- 정동준. 2018.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유권자들의 정치 양극화: 당파적 배열과 부정적 당파성을 중심으로.” 《OUGHTOPIA》, 33(3): 143-180.
- 하상응. 2018. “합리적 유권자를 찾아서.” 《디지털사회》, 13 <http://cdss.yonsei.ac.kr/wp-content/uploads/2018/09/issue13.pdf>
- Achen, Christopher H., & Larry M. Bartels. 2004. “Blind Retrospection Electoral Responses to Drought, Flu, and Shark Attacks.” Estudio/Working Paper 2004/199.
- Arceneaus, Kevin, & Robert M. Stein. 2006. “Who is Held Responsible When Disaster Strikes?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a Natural Disaster in an Urban Election,” *Journal of Urban Affairs*, 28(1): 43-53.
- Bækgaard, Martin, Julian Christensen, Jonas K. Madsen, & Kim S. Mikkelsen.

2020. "Rallying Around the Flag in Times of COVID-19: Societal Lockdown and Trust in Democratic Institutions." *Journal of Behavioral Public Administration* 3: 2.
- Baker, William D., & John R. Oneal. 2001. "Patriotism or Opinion Leadership? The Nature and Origins of the "Rally Round the Flag" Effect."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5(5): 661-687.
- Bartels, Larry M. 2002. "Beyond the Running Tally: Partisan Bias in Political Perceptions." *Political Behavior*, 24(2): 117-150.
- Baum, Matthew A. 2002. "The Constituent Foundations of the Rally-Round-the-Flag Phenomen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6(2): 263-298.
- Bechtel, Michael M., & Jens Hainmueller. 2011. "How Lasting is Voter Gratitude? An Analysis of the Short- and long-term Electoral Returns to Beneficial Polic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5(4): 852-868.
- Bisgaard, Martin. 2015. "Bias Will Find a Way: Economic Perceptions, Attributions of Blame, and Partisan-Motivated Reasoning during Crisis." *The Journal of Politics*, 77(3): 849-860.
- Bol, Damien, Marco Giani, Andre Blais, & Peter J. Loewen. 2020. "The Effect of COVID-19 Lockdowns on Political Support: Some Good News for Democrac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60(2): 497-505
- Burden, Barry C., & Casey A. Klofstad. 2005. "Affect and Cognition in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Psychology*, 26(6): 869-886.
- Cole, Shawn, Andrew Healy, & Eric Werker. 2012. "Do Voters Demand Responsive Governments? Evidence from Indian Disaster Relief."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97(2): 167-181.
- Druckman, James N., & Matthew S. Levendusky. 2019. "What Do We Measure When We Measure Affective Polariz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83(1): 114-122
- Erikson, Robert S., & Kent I. Tedin. 2005. *American Public Opinion: Its Origins, Content, and Impact*, New York: Pearson Education Inc.
- Eriksson, Lina M. 2016. "Winds of Change: Voter Blame and Storm Gudrun in the 2006 Swedish Parliamentary Election." *Electoral Studies*, 41: 129-142.

- Esaiasson, Peter, Jacob Sohlberg, Marina Ghersetti, & Bengt Johansson. 2021. "How the Coronavirus Crisis Affects Citizen Trust in Government Institutions and in Unknown Others – Evidence from 'the Swedish Experimen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60(3): 748-760.
- Evans, Geoffrey, & Robert Andersen. 2006. "The Political Conditioning of Economic Percep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8(1): 194-207.
- Fiorina, Morris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Fiorina, Morris. 2017. *Unstable Majorities: Polarization, Party Sorting, and Political Stalemate*. Stanford: Hoover Press.
- Hegewald, Sven, & Dominik Schraff. 2020. "Who Rallies Around the Flag? Evidence from Panel Dat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OSF Preprints. doi: 10.31219/osf.io/dwgsj.
- Johansson, Bengt, David Nicolas Hopmann, & Adam Shehata. 2021. "When the rally-around-the-flag effect disappears, or: when the COVID-19 pandemic becomes 'normalized'."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31(sup1): 321-334
- Lipsky, Phillip Y. 2020. "COVID-19 and the Politics of Cri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74(1): 98-127.
- Melanie Dietz, Sigrid Roßteutscher, Philipp Scherer, & Lars-Christopher Stövsand. 2021. "Rally Effect in the Covid-19 Pandemic: The Role of Affectedness, Fear, and Partisanship." *German Politics*, DOI: 10.1080/09644008.2021.2016707
- Mueller, John E.. 1973. *War, Presidents, and Public Opin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 Nadeau, Richard, Richard G. Niemi, & Antoine Yoshinaka. 2002. "A Cross-National Analysis of Economic Voting: Taking Account of the Political Context across Time and Nations." *Electoral Studies*, 21(3): 403-423.
- New York Times. 2020. "Coronavirus Has Lifted Leaders Everywhere. Don't Expect That to Last." 2020/04/15
- Parker-Stephen, Evan. 2013. "Tides of Disagreement: How Reality Facilitates

- (and Inhibits) Partisan Public Opinion.” *Journal of Politics*, 75(4): 1077-1088.
- Remmer, Karen. 2014. “Exogenous Shocks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Evidence from the Caribbea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7(8): 1158-1185.
- Rubin, Oliver. 2020. “The Political Dynamics of Voter Retrospection and Disaster Responses.” *Disasters*, 44(2): 239-261.
- Schraff, Dominik. 2020. “Political Trus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ally Around the Flag or Lockdown Effect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60(4): 1007-1017.
- Stanig, Piero. 2013. “Political Polarization in Retrospective Economic Evaluations during Recessions and Recoveries.” *Electoral Studies*, 32(4): 729-745.
- Stout, Kevin R. 2018. “Weathering the Storm: Conditional Effects of Natural Disasters on Retrospective Voting in Gubernatorial Elections - A Replication and Extension.” *Research and Politics*, October-December: 1-16.
- The Economist. 2020. “Rallying Round the Flag. Covid-19 Has Given Most World Leaders a Temporary Rise in Popularity.” 2020/05/09
- Whitten, Guy, & Harvey D. Palmer. 1999, “Cross-National Analyses of Economic Voting.” *Electoral Studies*, 18(1): 49-67.
- Wlezien, Christopher, Mark Franklin, & Daniel Twigg. 1997. “Economic Perceptions and Vote Choice: Disentangling the Endogeneity.” *Political Behavior*, 19(1): 7-17.
- Woods, Joshua. 2011. “The 9/11 Effect: Toward a Social Science of the Terrorist Threat.” *The Social Science Journal*, 48(1): 213-233.
- Yam, Kai Chi, Joshua C. Jackson, Christopher M. Barnes, Jenson Lau, & Hin Yeung Lee. 2020. “The Rise of COVID-19 Cases is Associated with Support for World Leader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7: 25429-25433.
- Yates, Suzanne. 1998. “Attributions about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ataclysmic Events.” *Journal of Personal and Interpersonal Loss*, 3(1): 7-24.

## 부록 1

	코로나 상황 인식			코로나 대응 평가			코로나 관련행동
	(1)	(2)	(3)	(4)	(5)	(6)	(7)
	감염위험	국가 경제악화	방역우선	대통령 평가	방역기관 평가	대한민국 평가	방역 수칙준수
Wave2	-0.00449 (0.00995)	-0.0809*** (0.00750)	-0.0953*** (0.00966)	-0.125*** (0.0114)	-0.183*** (0.0101)	-0.167*** (0.00998)	0.0325*** (0.00938)
이념 인식	0.000978 (0.00245)	0.00842*** (0.00185)	-0.0191*** (0.00238)	-0.0717*** (0.00277)	-0.0391*** (0.00245)	-0.0437*** (0.00242)	-0.000852 (0.00235)
연령	-0.00542 (0.00417)	0.00814** (0.00315)	-0.00233 (0.00405)	0.0113* (0.00470)	0.0241*** (0.00416)	0.0160*** (0.00410)	0.0166*** (0.00441)
성별	0.0106 (0.00985)	-0.0510*** (0.00743)	0.00435 (0.00957)	-0.0254* (0.0112)	-0.00549 (0.00989)	-0.00625 (0.00976)	-0.0272** (0.00889)
교육 수준	-0.0110* (0.00490)	0.00298 (0.00369)	-0.0133** (0.00476)	-0.00787 (0.00551)	0.0111* (0.00487)	-0.00193 (0.00481)	0.0112* (0.00444)
자산	-0.00420* (0.00186)	0.000702 (0.00140)	-0.00256 (0.00180)	0.00189 (0.00209)	0.00460* (0.00185)	0.00210 (0.00182)	0.00668*** (0.00182)
자가 소유	0.0227* (0.0113)	-0.00707 (0.00854)	0.00630 (0.0110)	-0.00832 (0.0127)	-0.00887 (0.0113)	-0.00833 (0.0111)	-0.00921 (0.0101)
혼인 여부	0.0161 (0.0120)	0.00776 (0.00909)	0.0191 (0.0117)	0.0354** (0.0136)	0.000561 (0.0120)	0.0237* (0.0118)	0.000392 (0.0110)
국가경 제악화				-0.330*** (0.0292)	-0.0490 (0.0259)	-0.201*** (0.0255)	0.122*** (0.0233)
_cons	0.573*** (0.0286)	0.796*** (0.0216)	0.879*** (0.0278)	1.225*** (0.0397)	0.912*** (0.0351)	1.052*** (0.0347)	0.486*** (0.0401)
N	2610	2610	2610	2610	2610	2610	2206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p&lt;0.05, \*\*p&lt;0.01, \*\*\*p&lt;0.001

부록 2

	(1)	(2)	(3)	(4)	(5)	(6)	(7)
	해외유 입차단	접촉자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공급	재난지원금	백신수급	접종진행 관리
wave2	-0.0670*** (0.0120)	-0.102*** (0.0103)	-0.0818*** (0.0106)	-0.0240* (0.0104)	-0.120*** (0.0101)		
이념 인식	-0.0527*** (0.00295)	-0.0418*** (0.00255)	-0.0390*** (0.00262)	-0.0403*** (0.00257)	-0.0397*** (0.00249)	-0.0243*** (0.00194)	-0.0219*** (0.00185)
연령	0.0279*** (0.00502)	0.0276*** (0.00434)	0.0288*** (0.00446)	0.0253*** (0.00437)	0.0188*** (0.00424)	-0.00122 (0.00329)	0.0131*** (0.00313)
성별	0.0241* (0.0118)	0.0133 (0.0102)	-0.0131 (0.0105)	-0.00177 (0.0103)	0.00306 (0.0100)	-0.0117 (0.00780)	-0.00354 (0.00742)
교육 수준	-0.00779 (0.00588)	0.00666 (0.00509)	-0.00679 (0.00523)	0.0108* (0.00513)	-0.00767 (0.00497)	-0.00657 (0.00388)	-0.00213 (0.00369)
자산	0.00246 (0.00223)	0.00560** (0.00193)	0.00357 (0.00198)	0.00335 (0.00194)	0.00172 (0.00189)	-0.00306* (0.00147)	0.00166 (0.00140)
자가 소유	-0.0294* (0.0136)	-0.0212 (0.0118)	-0.00879 (0.0121)	-0.0150 (0.0119)	-0.0156 (0.0115)	0.00142 (0.00898)	-0.00669 (0.00854)
혼인 여부	0.000557 (0.0145)	-0.00127 (0.0125)	0.00521 (0.0129)	-0.00836 (0.0126)	0.0139 (0.0122)	0.0101 (0.00954)	-0.000305 (0.00907)
_cons	0.700*** (0.0344)	0.766*** (0.0298)	0.687*** (0.0306)	0.728*** (0.0300)	0.821*** (0.0291)	0.643*** (0.0226)	0.586*** (0.0215)
N	2610	2610	2610	2610	2610	2610	2610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p<0.05, \*\*p<0.01, \*\*\*p<0.001

## 부록 3

	(1)	(2)	(3)	(4)	(5)	(6)	(7)
	감염위험	국가 경제악화	방역우선	국정지지율	대통령평가	방역기관 평가	대한민국 평가
이념	-0.00320 (0.00321)	0.00764** (0.00242)	-0.0176*** (0.00312)	-0.0817*** (0.00355)	-0.0739*** (0.00370)	-0.0286*** (0.00318)	-0.0385*** (0.00318)
wave2	-0.0608* (0.0296)	-0.0915*** (0.0223)	-0.0755** (0.0288)	-0.144*** (0.0328)	-0.0898** (0.0341)	-0.0322 (0.0293)	-0.0572 (0.0293)
wave2 * 이념	0.00987* (0.00488)	0.00185 (0.00368)	-0.00348 (0.00475)	0.0149** (0.00540)	-0.00148 (0.00563)	-0.0257*** (0.00484)	-0.0163*** (0.00484)
연령	-0.00537 (0.00417)	0.00815** (0.00315)	-0.00235 (0.00405)	-0.00857 (0.00462)	0.00865 (0.00481)	0.0236*** (0.00413)	0.0143*** (0.00414)
성별	0.0106 (0.00984)	-0.0510*** (0.00743)	0.00435 (0.00957)	-0.00438 (0.0109)	-0.00850 (0.0113)	-0.00302 (0.00976)	0.00400 (0.00976)
교육 수준	-0.0108* (0.00489)	0.00301 (0.00369)	-0.0134** (0.00476)	-0.0145** (0.00542)	-0.00888 (0.00564)	0.0106* (0.00485)	-0.00279 (0.00485)
자산	-0.00421* (0.00186)	0.000700 (0.00140)	-0.00256 (0.00180)	-0.00269 (0.00205)	0.00166 (0.00214)	0.00459* (0.00184)	0.00198 (0.00184)
자가 소유	0.0226* (0.0113)	-0.00711 (0.00854)	0.00636 (0.0110)	0.00358 (0.0125)	-0.00596 (0.0131)	-0.00806 (0.0112)	-0.00662 (0.0112)
혼인 여부	0.0160 (0.0120)	0.00775 (0.00909)	0.0192 (0.0117)	0.0362** (0.0133)	0.0329* (0.0139)	0.000388 (0.0119)	0.0223 (0.0119)
_cons	0.597*** (0.0308)	0.800*** (0.0233)	0.871*** (0.0300)	0.996*** (0.0341)	0.959*** (0.0355)	0.813*** (0.0305)	0.854*** (0.0306)
N	2610	2610	2610	2610	2610	2610	2610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p&lt;0.05, \*\*p&lt;0.01, \*\*\*p&lt;0.001



부록 4

	(1)	(2)	(3)	(4)	(5)	(6)	(7)
	감염위험	국가경제 악화	방역우선	국정지자율	대통령평가	전문방역 기관평가	대한민국 평가
이념	-0.00470 (0.00352)	-0.00425 (0.00259)	-0.00822* (0.00339)	-0.0205*** (0.00258)	-0.0140*** (0.00288)	-0.0000295 (0.00321)	-0.00233 (0.00303)
wave2	-0.0607* (0.0296)	-0.0903*** (0.0218)	-0.0764** (0.0285)	-0.151*** (0.0217)	-0.0960*** (0.0242)	-0.0351 (0.0270)	-0.0609* (0.0255)
wave2	0.00986* (0.00488)	0.00177 (0.00360)	-0.00342 (0.00471)	0.0153*** (0.00359)	-0.00112 (0.00400)	-0.0255*** (0.00445)	-0.0161*** (0.00421)
* 이념							
대통령	0.00179 (0.00172)	0.0142*** (0.00127)	-0.0112*** (0.00166)	-0.0728*** (0.00127)	-0.0714*** (0.00141)	-0.0341*** (0.00157)	-0.0431*** (0.00149)
호감도							
연령	-0.00540 (0.00417)	0.00784* (0.00308)	-0.00211 (0.00402)	-0.00702* (0.00306)	0.0102** (0.00341)	0.0243*** (0.00381)	0.0152*** (0.00360)
성별	0.0107 (0.00984)	-0.0498*** (0.00726)	0.00335 (0.00949)	-0.0109 (0.00723)	-0.0149 (0.00806)	-0.00605 (0.00898)	0.000168 (0.00849)
교육	-0.0108* (0.00489)	0.00290 (0.00361)	-0.0133** (0.00472)	-0.0139*** (0.00359)	-0.00832* (0.00401)	0.0109* (0.00446)	-0.00245 (0.00422)
수준							
자산	-0.00422* (0.00186)	0.000614 (0.00137)	-0.00249 (0.00179)	-0.00225 (0.00136)	0.00209 (0.00152)	0.00480** (0.00169)	0.00224 (0.00160)
자가	0.0226* (0.0113)	-0.00644 (0.00835)	0.00583 (0.0109)	0.000142 (0.00832)	-0.00933 (0.00927)	-0.00967 (0.0103)	-0.00865 (0.00977)
소유							
혼인	0.0166 (0.0121)	0.0124 (0.00889)	0.0155 (0.0116)	0.0122 (0.00885)	0.00933 (0.00987)	-0.0109 (0.0110)	0.00807 (0.0104)
상태							
_cons	0.593*** (0.0310)	0.771*** (0.0229)	0.894*** (0.0299)	1.143*** (0.0228)	1.102*** (0.0254)	0.881*** (0.0283)	0.941*** (0.0267)
N	2610	2610	2610	2610	2610	2610	2610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p<0.05, \*\*p<0.01, \*\*\*p<0.001

## The Durability of the Rally-around-the Flag Effect and Restoration of Partisan Politics: The Political Impact of Prolonged Covid-19

Jin Seok Ba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partisan politics expressed in the weakening and disappearing of rally-around-the-flag created by Covid-19 through changes in citizens' opinions on the response of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to the pandemic. While studies on the occurrence of the pandemic-related rally effect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research on this effect's durability and extinction process has received relatively scant attention.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First, when the quarantine performance is overwhelmingly good, political opponents have difficulty denying the version, so the gap in evaluation between partisans is relatively narrowed. However, political opponents do not want to attribute the achievement of quarantine to the president. Second, if the quarantine performance is controversial, political supporters and opponents will revalue or devalue the performance, respectively. Thus, performance evaluation is highly likely to be ideologically polarized. Third, the difference in the evaluation of the quarantine performance is more likely to be an emotional polarization stemming from positive or negative perspectives about the president rather than ideology or policy preference. This study confirmed the influence of partisan mindset that exerts adaptability even in times of exceptional crisis such as a pandemic.

※ Keywords: Covid-19, Partisanship, Rally-around-the-Flag